



: 2017-12-20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오2 직무유기
피 고 인 A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노130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5.

주 문

원판결 중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7. 6. 30.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 피고사건에서 형법 제 12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 및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기간의 경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



: 2017-12-20

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

주 심 대법관 김창석 _____

 대법관 이기택 _____